

| 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보도 일시 | 배포 즉시 | 배포 일시 | 2022. 7. 27.(수) | |
| 담당 부서 |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| 책임자 | 과 장 | 홍경의 (044-202-7026) |
| | | 담당자 | 서기관 | 고혜연 (044-202-7027) |
| 담당 부서 | 노동정책실 노사관계법제과 | 책임자 | 과 장 | 황효정 (044-202-7611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이창기 (044-202-7637) |

정부가 대체근로 허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

1. 주요 기사 내용

- 7.27.(수) 매일경제(인터넷), 「특하면 파업에... 정부, 대체근로 길 터준다」, 「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...대체근로 확대로 勞使 균형 맞춘다」 기사 관련

- 복수의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 하면서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과제로 '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범위 확대'를 포함했다.
- 이런 가운데 정부가 '대체근로 허용 범위 확대' 카드를 꺼내든 것은 "대체근로 규제가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사용자의 경영권과 재산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다"는 경영계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.

2. 반박 내용

- 정부는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범위 확대를 검토한 바 없으며,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확대 추진을 보고한 바 없음
- 따라서, 해당 보도를 인용하는 것은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
-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의 개선에 대해서는 추후 경사노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대화 추진, 논의과제·세부운영방식 등은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